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

정부는 작년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고, 올해를 생산적 복지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개발 중심으로 노동참여를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제도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경제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생산적 복지의 출발점이다.

금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더 이상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1인 가구는 약 32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9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실직자, 청년 실직자, 장애인, 조기퇴직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활지원금고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노숙자, 쪽방거주자, 장기실직자, 결식아동 중 굶주림의 위험에 직면한 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필요한 식품이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긴급 식품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높이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수당을 장애등급별 및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장



金 有 培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생산적 복지는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부터,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제도화를 요구한다.

어로 인한 추가적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저소득가구원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병에 걸렸을 때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준고령자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사회신탁재산연금제도'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회신탁재산연금제도는 55세 이상 준고령자 중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공공신탁 회사에 위탁하여 비과세 및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남은 여생동안 고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 사망시 신탁재산을 회사에 환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연금제도이다.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그 책임을 묻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법정 최저 근무일수(3개월)를 단축하여 보험 적용 근로자의 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이들이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아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

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서민·중산층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응하는 규모의 복지예산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예산은 그 동안 개발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과세기반의 확충 등 세정·세제를 개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다. 그 동안 음성탈루 소득의 적발에 노력한 결과 1998년에는 1조 3천억원, 1999년에는 2조 5천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자소득과악률을 제고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원칙하에 복지재정의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변명을 이룩하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시행한다고 해도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새 천년 벽두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 **▶▶▶**